

“다문화교육 전면 개선을”

나인권 도의원, 도정질의서 예산·대안 마련 촉구
김승환 교육감 “지역실정 맞는 통합교육 실시
취지 살리고자 별도 정책학교 신규지정 하지 않아”

2012년 3,064명에 불과하던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매년 20%씩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현재 8,313명으로 전라북도 전체 학생 수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 2)이 16일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도 교육청의 다문화 교육 전반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 및 사업 확대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며 지적한 질문이다.

나 의원은 도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도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관련 자체예산(국비제외)은 10억2천7백만 원으로 다문화교육사업을 시작한 2013년 약 11억4천8백만 원에 비해 1억2천7백만 원이 줄었다.

반면 그간 국내 다문화학생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상태임에도 자체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국비 확대는 전국 지자체에 다 해당하는 부분으로 다른 지자체의 경우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다문화교육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국내 다문화학생은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도 교육청은 다문화교육사업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

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줄어든 것은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다문화정책학교와 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다문화사립학교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교육부에서 다문화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다문화정책학교와 한국어학급을 지정하여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그 지정학교 수가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에는 아예 신규지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나 의원은 “다문화정책학교와 한국어학급은 다문화학생들과 중도입국학생들에게 한국사회와 학교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운영비 역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에서는 다문화정책학교의 수를 수년째 늘리지 않고 있으며 양보다는 질 확보에 우선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놓고 있다”며 질타했다.

또한 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다문화사립학교 역시 다문화학생들과 비다문화학생들이 함께 다문화교육을 받으며 다문화 감수성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지정학교 수를



늘어나가야 함에도 2013년 130곳에서 18년에는 77곳까지 줄었다가 19년 현재 110곳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지적에 김승환 교육감은 “도 교육청은 문

화다양성을 고려한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교육을 실시하지는 취지를 살리고자 별도로 다문화정책학교 신규지정을 하지 않았으며, 대신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사립학교를 전년보다 확대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운영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나 의원은 그밖에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학교부적용 학생과 중도입국학생들을 위한 다문화대안학교의 설립, 다문화 전담교원(한국어강사, 이중언어강사 등)의 확보 및 확대, 교육청 내 다문화전담팀 신설, 전북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개선, 다문화학생 학습능력 향상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다문화학생은 우리가 짊어줘야 할 짐이 아니다. 이들을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글로벌인재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식의 전환, 즉 전 도민, 전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더불어 한국어 등 학습능력향상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전라북도도와 도 교육청이 함께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고민형 기자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전·처우개선 대책 마련해야”

성경찬 도의원, 도정질문서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군 제1선거구)은 제367회 임시회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서로 나섰다.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정규직 전환대상임에도 전북도교육청은 2018년 2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성경찬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가 밝힌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평등원칙과 신뢰보존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헌법상 평등원칙이 화석화된 문자가 아닌



라면 지금 교육감님이 즉각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직종으로 정규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성경찬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과 업무의 근거인 학교체육진흥법 제1조가 제시한 목적인 학생의 체

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업무가 향후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정규직 전환은 당연한 수순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북도 학교운동부지도자 230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고용안정을 희망하는 응답률이 94%에 달했다”며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성과 처우개선을 토대로 학교체육정상화와 발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수월의 행복과 미래 위해 전북교육청도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교육청과 달리 광주, 경남, 세종, 충북, 울산, 충남, 전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했다.

/고민형 기자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허점 투성!

조배숙 의원, 미흡한 절차개선 강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 기업에 상환되는 과정에서 자금 신청 권한 미부여 기업에 대한 사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 을)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

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진공 상담과정에서 정책자금 신청권한을 부여 받지 못한 기업은 운전자금 34,816건, 시설자금 8651건으로 총 4만 3467건에 달하며, 이 중 절반가량이 21,513건이 어떤 사유로 신청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는지 자체적으로 전혀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 창출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이 자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청권한 미부여 사유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검토가 필요함에도 관리가 되지 못한 것은 중진공의 업무태만이

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중진공은 인터넷으로 정책자금 지원 상담 접수 신청을 받고, 사전상담을 진행하여 정책자금 신청 여부를 결정해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터넷 접수가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등의 크고 작은 문제가 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조배숙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중진공의 문을 두드리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떤 이유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지 집행기관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중진공은 향후 정책자금 지원 절차의 미흡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이춘석 의원,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방안 모색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디지털기업에 대한 세금 제도를 부과하기 위한 논의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 논의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글로벌디지털기업들은 별도의 해외 공장과 지사를 두지 않고 세계 각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물리적 현재 사업장을 바탕으로 마련된 현재 세법으로는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경제에서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 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눈길을 끌었다. 이춘석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향후 논의가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국정감사 정리하며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당 정동영, 김광수, 박주현 의원이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군산 새만금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유성엽 “위장전입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사회 불평등 문제 철저히 규제해야”



제31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가칭) 유성엽(정읍·고창)대표와 윤영일(해남·완도·진도)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간담회가 ‘청년의 좌절과 분노, 무엇부터 해야 하나’ 주제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간담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경쟁과 힘든 취업난에 지치고 이러한 현실을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과 정책개선 방향이 있을지 모색하기 위해 열린 자리였다.

유 의원은 “헬조선, 금수저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게 청년들을 통해 자주 듣게 되는데, 왜 우리 청년들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었을까?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가 고

민하고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간담회를 주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공공의 질적 향상과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학입시 제도 또한 재검토하여 공정한 입시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맥을 통한 실습 기회, 학습환경을 위한 위장전입 문제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사회 불평등 문제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신영대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 26일 출판기념회 개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새로운 군산을 꿈꾸는 포부를 밝히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민주당 군산지역위에 따르면 신영대 위원장이 ‘담담한 나라 새로운 군산’을 출간해 오는 26일 군산 어린

이공연장(구 KBS방송국)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담담한 나라 새로운 군산은 신영대 위원장이 자신이 살아온 내력과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갈 군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신영대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떠나고 일자리가 없어 황폐해진 군산에 다시 생기와 활력을 만들어 새로운 군산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www.fplove.or.kr

충! 전주매일 참가

15 동시연금지급01 1,160,000
415 농지연금지급02 1,160,000
515 농지연금지급03 1,160,000
615 농지연금지급04 1,160,000
715 농지연금지급05 1,160,000
815 농지연금지급06 1,160,000
915 농지연금지급07 1,160,000
30915 농지연금지급08 1,160,000
30915 농지연금지급09 1,160,000
30915 농지연금지급10 1,160,000

농지연금 신청하고~ 생활자금 매월 받고~

부모님 통장으로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힘든 농사일을 계속 해오신 우리 부모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으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주세요.

농지연금이란? fb 농지은행 KR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서, 경직이나 임대료 인건 추가수익도 가능하고 부부 모두가 보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신청자격: 65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